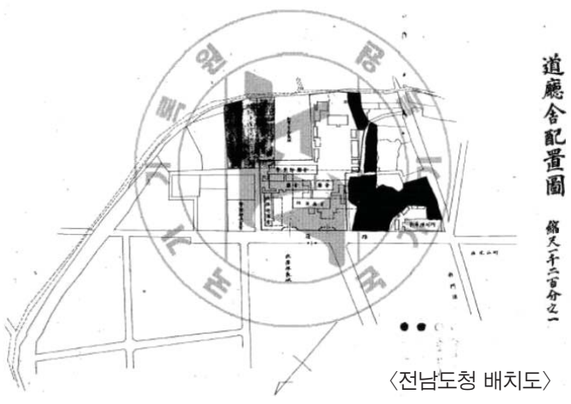
나주·목포와 3파전서 승리한 광주, 100년 터전 끌어안다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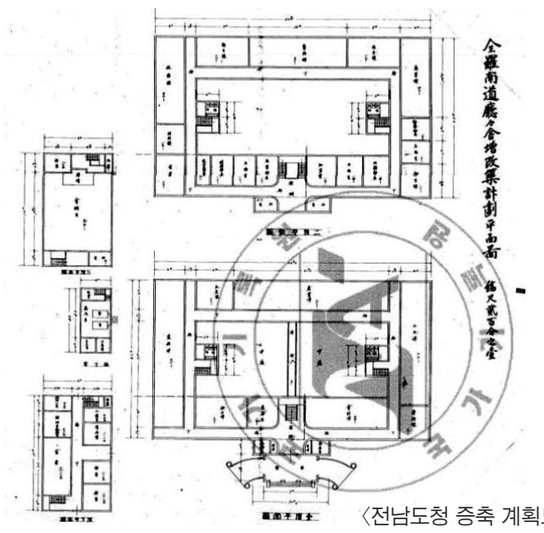
〈광주편〉

14. 광주 성장 밑거름, 전남도청 발자취

1896년 나주에 있던 관찰부가 광주로 넘어온 뒤 10여 년 동안 나주와 신도시로 급성장한 목포, 그리고 광주가 전남도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 경쟁의 승자는 광주였고, 이후 호남지역 근대사는 광주를 중심으로 써내려간다. 사진은 1930년대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배치도〉



〈전남도청 증축 계획도〉

193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가 작성한 '전라남도청사증축공사계획서'에 포함된 전남도청 배치도와 증개축계획도. 전남도청은 애초 본관과 좌우 1동, 오른편에 조선시대 관사를 개조한 별관, 그리고 상품진열소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공식적으로 1907년 설립된 이후 1931년까지 5차례 증축공사가 있었다.

관찰부 이전 후 10년 각축 끝 유치…옛 도청자리에 둥지

중심상권 광주로 호남 발전 선봉…日, 관청 장악 시작

근대역사에서 광주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는 나주에 있던 전라남도 관찰부의 이전이다. 사실 1895년 쇠락해가는 대한제국이 지방제도를 기존 8개도(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23곳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23부제로 나누는 지방제도개혁을 단행할 때만 해도 광주는 이 명단에 없었다. 전라도에서 3부는 바로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였다. 그 이듬해인 1896년 8월4일 다시 이를 13도로 합치면서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뉘게 되는데, 이 때 나주의 관찰부가 광주로 이전하게 된다.

그 배경에 관해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자료가 이번 시리즈 취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는 191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과가 작성한 '지방청 이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서류'다.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전남도청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관찰부가 광주로 이전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다. 일제 관리는 전라남도를 목포지방, 나주지방, 광주지방, 해남지방, 순천지방 등으로 나눈 뒤 장단점을 분석하고 나주와 목포로의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찰부의 광주 이전은 어디까지나 당시 관찰사의 돌출행동에 따른 '임시조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 '전남편'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1900년대 초반부터 1910년대까지 전남도청을 둘러싸고 원래 '주인'인 나주와 전라남도에서 행정구역상 유일하게 군이 아닌 '부'의 자격을 얻을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하던 개항장 목포, 그리고 뒤늦게 '단맛'을 본 광주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된다. 1897년 7월30일 목포항의 개항과 동시에 급성장하는 목포는 1906년 2월1일 일제의 통감부 설치 이후 영사관이 아닌 이사청이 설치된다. 일제의 강제병합을 위한 준비단계의 지방기관인 셈이다. 이사관이 관할하는 목포이사청은 같은 해 10월18일 관찰부가 있는 광주에 부이사관이 관장하는 부이사청을 설치하는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광주는 일제가 조직한 행정구역상 목포의 하부기관이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7년 7월24일 한일 간 새 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인들이 기존 한국 중앙정부 및 지방관청의 관리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이사청과 부이사청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으며, 전남도청, 목포부청, 광주군청 등의 주요 자리를 일본인 관리들이 독점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마찰과 논쟁 속에서도 전남도청은 광주에 자리를 틀었다. 그리고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의 호남지역 개발과 성장은 광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금의 광주를 만든 것이 이 '전남도청'을 지켜낸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미다.

광주읍성이 1909년부터 철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읍성이 존재했던 1907년, 다시 말해 일본인들이 전남도청의 관리로 임용되기 시작한 시점에 전남도청 청사가 설립됐다고 일본인 기타무라 유이치로(北村友一郎)는 '광주지방사정(1917)'에 적고 있다. 광주군 성내면 동광산정(광산동 일대) 내 5000평 부지에 건평 482평의 서양풍 목조 건축이었다. 일부분은 원래 자혜의원 부지에 있던 조선 관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읍성 내에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 주요 관청들이 자리했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동헌이었다. 동헌은 고을 수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었고, 당시 동헌에는 나주에서 '쫓겨난' 관찰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지금의 상무관 자리 인근이 동헌이었으며, 맞은 편에 바로 전남도청이 들어선 것이다. 1910년 강제병합 전까지 일본인 관리들은 전남도청에서, 한국 관리는 동헌 등에서 업무를 봤고, 일제는 사실상 이 시점부터 지방관청을 접수해 나갔을 것이다.

1917년 당시 전남도청은 3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정면 본관에는 지방계, 서무계, 회계계, 각실 및 참여관실, 좌측 1동에는 이재계, 세무계의 각실 및 2부장실, 회계창고, 우측 1동에는 권업계, 회의 및 응접 각 실, 장관실, 일부 부장 및 장관 관방이 있었다. 또 이 3개 동의 오른쪽에 있던 기존 조선 관사를 개조해 학무계, 토목계 및 기타 소사실, 숙직실, 10여 동의 건물이 있었다. 모든 사무실은 매우 좁아 증축을 계속했고 그 외 부속 건물로는 장관(도지사) 관저, 1·2부장 관사 등이 있었다. 1930년 당시 전라남도의 직재는 내무부(지방과, 학무과, 산업과, 농무과, 토목과, 회계과 등), 재무부(세무과, 이재과), 경무부(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 및 위생과)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전남도청의 행정사무는 나날이 늘고 공무원 수도 급증하면서 공식적으로 1915년, 1919년, 1920년, 1930년, 1931년 각각 증축한 사실이 국가기록원 자료(193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의 '전라남도청사증축공사계획서')에 기록돼 있다. 1931년 증축 사유로는 1930년 일부 청사만을 개축해 지사 관방, 학무과, 토목과, 회계과, 지사, 내무부장, 각 실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또 1915년 증축을 통해 농무과 사무실, 1919년 경찰부 청사, 1920년 산업과 등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건물 및 그 외 각 사무실이 좁고 통풍 및 채광이 최악이었으며,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1934년에는 도청에서 재무과가 분리되면서 신광주역(남광주역) 앞 세무감독국이 들어서 전남과 전북을 모두 관할했다.

부속건물인 전라남도 물산진열관은 광주 동광산정에 전라남도 도청과 마주 보고 있었다. 건평은 신구 건물을 합쳐 86평으로, 구관은 과거 관찰도 청사 즉 동헌의 일부를 개축, 다시 내부 구조를 개수해 1911년 개관하고 신관은 1916년 10월 신축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관에는 공산물을, 구관에는 농·임·수산 및 농기구 등을 전시했으며, 1917년 당시 전시물품은 모두 1765점에 달했다. 이 물산진열관은 1928년 도지방비 5만여 원을 투입, 옛 전남도의회 자리로 이전신축해 전라남도 상품진열소로 개칭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옛 전남도의회 자리에 있었던 전라남도 상품진열소. 동헌 인근, 다시 말해 전남도청의 맞은편에 있다가 1928년 도청 옆으로 이전신축됐다.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